



청구인의 산재 보상 기록
산재보상 허가서
(산재보상법 110조 a항 의거)

PO Box 5205, Binghamton, NY 13902-5205 • www.wcb.ny.gov

청구인은 산재보상 정보를 각 고용주에게 또는 고용에 대한 적합성 또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공개할 수 없습니다.
모든 입력란에 기재하십시오. 작성이 완료되지 않은 양식으로 해당 건의 처리 기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Form with fields for: 청구인의 이름, 청구인의 소셜 시큐리티 또는 납세자 식별 번호, 케이스 번호 (WCB, DB, 차별, PFL) 및/또는 사건 일자

WCB/DB/DC/PFL 케이스 번호 및/또는 사건 일자별로 아래에 명시된 추가 케이스 건에 대한 공개가 허가된 경우

유의사항:
종업원 상해 보험 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에 원본을 제출하고 해당 기록에 대한 사본은 보관하십시오. 법률 상 특정 목적을 위한 기록 공개 승인은 유효하지 않습니다. 이 양식의 역순으로 WCL 섹션 110-a의 발췌 부분을 참조하십시오. 이 승인은 청구인이 취소할 때까지 유효합니다. 청구인은 종업원 상해 보험 위원회에 서면 통지를 전달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승인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본 승인은 귀하가 개별 e케이스 계정을 열거나 또는 위원회 위치를 벗어나 e케이스를 통해 케이스를 보는 권한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산재보상법 110조 a항에 의거 본인, (청구인의 이름)

은(는) 본인이 상기 명시된 산재보상 케이스의 대상이거나 당사자였음을 나타내며, 본인은 종업원 상해 보험 위원회가 상기 관련 종업원 상해 보험 위원회 자료를 검토하고 다음 기관에 전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특정 개인, 회사, 단체, 공공 또는 개인 단체의 이름)

(주소지: (주소))

본인은 요청하는 당사자가 종업원상해보험위원회가 이 기록에 대한 사본을 받기 전에 법정 수수료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음을 이해합니다.

청구인의 서명(잉크만 사용 - 가능한 경우 파란색 잉크 사용) 날짜

이 양식에서 요청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해당 승인은 거부되지 않지만 요청 처리 시간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소셜 시큐리티 번호를 자발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위원회는 해당 요청에 관하여 정보가 연결되고 빠른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 해드립니다.

산재보상법 110조 a항 의거:

3. 개인 허가. 이 절의 조항에서 명시된 공개 제한에도 불구하고 산재보상기록 대상자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공개에 대해 서면 허가서를 제출하거나 위원회에 산재보상 기록을 공개하라는 특별 지시가 기술된 공증을 받은 원본 허가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기록을 타인에게 공개하거나, 재공개하거나, 또는 발행하도록 허가할 수 있으며, 달리 그러한 기록을 수령할 권한이 없는 타인은 제외됩니다. 단, 이 절의 125조에 따라 미래 고용주에게 기록의 공개를 지시하는 그러한 허가는 유효하지 않으며, 적합성 또는 고용 능력 평가 활동과 관련하여 기록의 공개를 허가하는 승인도 유효하지 않고, 그에 따라 기록의 공개가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수혜 자격을 평가할 목적으로 또는 고용 관련 조치의 기초로서 개인이 본 항에 의거한 허가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4. 달리 합법적으로 이러한 기록을 얻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그러한 정보를 공개하기 위해 위원회 기록으로부터 사본을 구했거나 개인 신원 정보를 입수하는 행위는 위법입니다.
5. 허위로 또는 조항을 위반하려는 방식으로 개인 신원 정보가 포함된 산재보상 기록을 의도적으로 및 고의적으로 취득한 자는 A급 경범죄의 유죄를 저지르는 것이며 유죄 판결을 받았을 경우 1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6. 본 조항에 의거하여 가능한 모든 형사 소송 절차 외에 또는 이를 대신하여 본 절의 위반이 일어날 때마다 법무 장관이 금지 명령을 발부하는 특별 절차에 따라 뉴욕 주 주민의 이름으로 법원이나 사법부에 신청하여 5일 이상 피고에게 통지를 전달함으로써 그러한 위반의 지속을 금지하고 제재하는 관할권을 갖습니다. 만일 법원이나 법관이 피고가 실제로 이 조항을 위반했다고 판결했을 경우 해당 법원이나 법무부에서 부상을 입거나 피해를 입은 자가 있다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고도 더 이상의 위반을 금지 및 제한하는 명령이 하달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에서 법원은 민사 실무법 및 규칙 83조(a)절 6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법무 장관에게 보상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절의 위반이 발생했다고 판단할 때마다 법원은 첫 위반 건에 대해 500달러 이하의 민사 처벌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3년 이내에 두 번째 또는 후속 위반에 대해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제안된 신청과 관련하여, 법무 장관은 민사 실행법 및 규칙에 따라 관련 사실을 증명하고 소환장을 발급할 권한이 있습니다.